

회의진행순서

- 일 시 : 2022. 7. 15. (금) 14시
- 장 소 : 서울기록원 5층 회의실
- 심의 안건

<안건1> 환경영향평가서 기록(30년 미경과)

<안건2> 관급 건설공사 설계도서,감리보고서(30년 미경과)

<안건3> 개인정보 포함 30년경과 기록의 공개범위 확대

<안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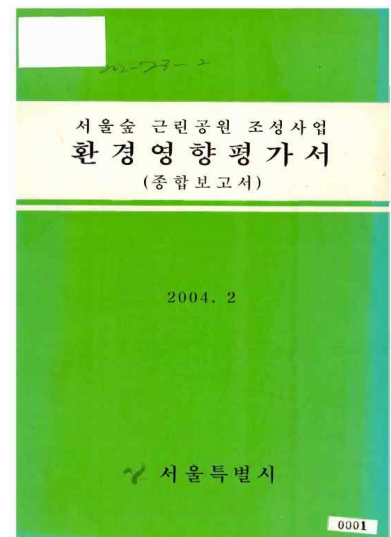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서 기록의 공개범위

I

기록개요

- ☐ 개 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종 개발사업 주체로부터 접수한 환경영향평가서 기록
 - ※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 생산시기 : 1984년 ~ ※ 대부분 2000년대 이후(30년 미경과)
- ☐ 생산부서 : 환경과(환경영향평가 주관부서) 및
개별 사업 관련부서(물재생계획과, 도시관리과, 주택기획과 외)
- ☐ 분 량: 약 1,500권(약 3,500건 이상)
- ☐ 주요 유형 및 포함 정보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서 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환경영향평가서 보완(1차,2차,... 최종)- 사후 환경영향평가서
포함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개요- 지역개황(입지, 토지이용현황, 환경현황)- 평가항목- 사업시행 영향 예측 등- 작성 참여자 명단(분야,소속,성명,직위,자격 등)



- ☐ 현 공개입력값: 공개, 비공개 혼재(5호,7호)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공개)

-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2조(평가서의 공개)

- ①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평가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평가서 등에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평가서 초안의 열람 등)

-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주관구청장(이하 "주관구청장"이라 한다)은 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 평가서초안을 20일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열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주관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초안 전부 또는 일부의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구청장은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 현행 공개 현황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

사업조회
EIA Information

평가정보조회

전체목록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조사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진행현황 ☒ 완료 ☐ 진행중 ☐ 전체 | 원문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 전체

진행구분 ☐ 초안 ☒ 평가서 ☒ 재협의 ☒ 약식평가 ☐ 변경협의

접수년도 년도 ~ 년도 | 협의년도 년도 ~ 년도

협의기관 생태계보전부담금

☒ 사업명 ☐ 사업지주소 ☐ 사업코드 ☐ 사업시행자 ☐ 평가대행자

검색 상세검색

검색결과 : 6,533건

사업코드	평가구분	사업명	접수일	완료일	진행현황
GG2022N001	체육시설의	태안 썬비치(대중제 18홀)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2022.05.19	2022.06.27	재협의(완료)
HG2021G001	철도(도시철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2022.05.04	2022.06.13	본협의(완료)
YS2022E001	도로의 건설	염산-영광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22.04.26	2022.06.29	본협의(완료)
ME2022C006	에너지개발	강원풍력 발전단지 건설사업(리파워링)	2022.04.21	2022.06.20	약식평가(완료)
ME2021A025	도시의 개발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022.04.12	2022.06.14	본협의(완료)

상세정보	평가서작성정보	협의진행현황	초안공람
결정내용공개	주민의견수렴결과	원문정보	

* 평가진행중인 사업, 협의결과 반려 및 취하 사업, 비공개 요청 사업, 군사 및 국가주요시설사업의 원문은 비공개됩니다.

* 평가서 원문은 저작권정책에 따라 열람 및 인쇄만 가능하며, 다운로드 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원문 인쇄 기능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지원 - 저작권정책 메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안

본안

- 간지_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hwp.pdf
- 목차_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pdf
- 앞표지_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hwp.pdf
- 제10장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_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pdf
- 제11장 대안설정 및 평가_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pdf
- 제12장 종합평가 및 결론_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pdf
- 제1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여부_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pdf
- 제14장 부록(1)_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pdf

- 2003년 이후 환경영향평가 4만여건이 탑재되어 있으며 평가완료된 사업의 대부분은 공개로 제공되고 있음(95%)
- 평가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참여인력 성명을 비식별화하여 공개하는 경우가 다수

3) 토양 측정·분석 : (재)FITI시험연구원

분 아	등록번호	등록일자	지정기관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충북 제 2013 - 3호	2012.03.	충청북도청
성 명	자격 및 면허	참여내용	비 고
홍 ○ ○	수질환경기사	환경질 측정·분석 업무총괄	
박 ○ ○	응용지질기사	현장조사 및 분석	
임 ○ ○	토양환경기사	현장조사 및 분석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

<https://eims.seoul.go.kr>

환경영향평가시스템 평가완료사업 사업명 검색 I-SEOUL-U

환경영향평가 안내 평가진행사업 평가완료사업 심의위원회 소식알림

평가완료사업

협의완료사업 HOME > 평가완료사업 > 협의완료사업

> 사업기본정보

사업번호	EN2002-3	진행단계-진행상태	평가서 - 검토완료
사업분야	도시의 개발		
사업명(평가서명)	가산동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		
주관기관	자치구 금천구		
승인기관	자치구 금천구		
사업지역위치	가산동 371-62번지		

사업정보	평가서 정보	협의내용	환경보전방안서 정보	이행계획서 및 종합보고		
번호	평가서 구분	공개여부	진행상태	평가결과	등록자	등록일
	작성계획서	비공개			관리자	2010-02-18
	평가서초안	비공개			관리자	2010-02-18
1	평가서	비공개	검토완료		관리자	2010-02-18

- 2003년 이후 환경영향평가 완료 사업 260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기 환경영향평가서는 비공개 등록된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공개가 다수
- 평가서를 공개하는 경우 작성자 정보(성명,소속,분야,자격 등)을 포함하여 공개

□ 인적사항

분 야	성 명	자격및면허
총 괄	강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미기상	정	보건원(석)-887
대기질	이	대기환경기사

□ 관련 판단사례

○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환경 관련 사업계획(승인)내용` 문서

〈부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요청 정보 내 세부 설계도면, 건축기술 및 노하우 등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상기 우려가 없는 요약문을 공개(2015년 제3차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 검토의견

-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을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 및 업무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서울기록원에서 보유 중인 생산된지 10년이상 경과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비공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영업 비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조례에 의하면, 해당 사업의 영업 비밀이 포함된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생산된 지 10년이상 경과한 기록이므로 원칙적으로 현재까지 적용되는 영업 비밀 관련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임. 판단이 어려운 경우 생산부서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검토 후 공개 가능할 것임
- (개인정보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마)을 적용하여 작성자 정보(성명,소속,자격,분야 등)을 대해 공개 가능하다고 판단됨. 또한 현재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을 통해서도 대부분 공개되고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가 가능할 것임.
- (국가안보 관련) 또한, 군시설 등 국가안보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동조례 제32조 등에 의해 비공개 가능할 것임

□ 재분류 결과

기록물유형	구분	재분류의견	비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안,최종 등)	30년경과	공개	※ 단, 군시설물 등 국가안보 관련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공개 가능 ※ 영업 비밀 관련성에 대해 생산부서 의견 청취 후 판단 가능
	30년 미경과	공개	※ 참여인력(작성자)의 성명, 소속,자격 등 공개 가능

〈안건2〉

관급 건설공사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의 공개범위

I

기록개요

- ☐ 개 요: 서울시가 건설하는 각종 건축물 등의 공사 과정에서 생산·접수되는 각종 설계도서(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산출내역서, 건축설비계산 서류, 토지·지질 관계서류 등) 및 감리보고서(월간, 중간, 완료보고서) 〈단, 이번 안건에서는 도면류는 제외함〉
※ 관련 법령: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4호, 제22조 외),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 생산시기: 1960년대 ~ (주로 1980년대 이후)
※ 30년 미경과 포함
- ☐ 생산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올림픽건축담당관 외
- ☐ 분 량: 약 4,000권(약 1만건 이상)
- ☐ 현 공개입력값: 공개, 비공개 혼재(3호, 5호, 7호) ※ 비공개 다수

2

기록물 내용

- ☐ 주요 기록유형 및 포함정보

구분	유형	주요 기록
설계 도서	시방서	설계도에 기재할 수 없는 자재, 장비, 설비의 내역과 요구되는 시공 기술 성능 및 기타 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기재한 문서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등
	구조계산 관련	구조계산서, 설비계산서, 수리계산서 외
	공사비용 관련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원가계산서, 단가조사서, 산출조사서 외

구분	유형	주요 기록
	토지·지질 관련	지질조사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외
	감리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계획서 - 월간/분기/중간 감리보고서 - 최종/완료 감리보고서, 감리용역 준공보고서 <p>(주요 포함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현황(공정표, 관리자 현황, 하도급 현황, 인력투입 외) - 감리현황(과업 수행현황, 주요 감리사항, 자재 품질시험 외) - 과업수행현황(과업지시 처리사항, 조치사항 외) - 감리수행 조직, 참여인력 등

3

공개검토

□ 관련 현황

○ “서울시 건설알림이” 서비스를 통한 건설공사 정보 제공

<https://cis.seoul.go.kr>

-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공정률, 현장사진, 계약·집행현황, 참여인력, 결재문서 등 온라인 제공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

주무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

공 사 명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8공구)

견학신청

공사개요

계약현황

집행현황

공정사진

참여자현황

추진과정

부실벌점

D-DAY 902

총공기 8218

경과일 7316

착공 2002-07-03

준공 2024-12-31

공정현황

계획 97.25%

실적 0%

달성 0%

계획

실적

조감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8공구)

개요

공사위치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과천시 주암동~강남구 수서동(수서IC)

공사기간

2002-07-03 ~ 2024-12-31

사업규모

7.96km, 양복 4~10차로 - 본선 : 교량(2개소)540m, 지하차도(4개소) 2,790m, 토공구간...

주무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박희정(주무관)(Tel: 02-3708-8664)

건설사업 관리단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이기수(책임건설사업관리자)(Tel: 02-529-5136)

시공사

롯데건설(주)
박광석(현장대리인)(Tel: 02-577-2469)

총사업비

346,049 백만원 :: 도급비 (346,049 백만원)

○ **생산부서 공개 현황**

- 공개와 관련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담당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공개시 시설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설계도면 등을 제외한 도서들은 공사 종료 후에는 공개하는 방향

□ **관련 판단사례**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 투자사업(서울시 공고 제2019-3201호)
관련 최초 제안자 제안서, 총사업비 산출내역서**

〈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총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제안업체가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공개할 경우 향후 동종·유사사업 참여 시 경쟁업체가 제안업체의 기술·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됨으로써 제안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2020년 제3차 서울시 정보공개 심의회)

○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공개〉

-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6두20587)

○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

〈공개〉

- 피고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비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상 편의를 거두는 이익이 공개함으로써 조성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부투자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질 수 있는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익 등 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서울행법 2005구합12398)

○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에는 각 (하)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와 그 산출근거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는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임

□ 검토내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 안전 정보)
 - 현존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의 경우 공개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보아 비공개 가능할 것이나,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감리보고서 등의 도서는 공개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범죄에 활용되거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적용 여부(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정보)
 - 입찰, 계약 종료 전의 경우 설계도서의 공개시 공정한 입찰, 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이나, 우리 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들은 생산된지 10년이 경과하고 실제 활용이 종료된 기록으로서 공개한다고 하여 공정한 입찰, 계약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적용 관련(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산출내역, 원가계산서 등)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와 산출근거는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우리 원 보유 기록은 생산된지 10년 이상 경과한 기록으로서 10년 이전의 원가정보 및 산출 내역을 공개한다고 하여 현재의 경영상 이익을 침해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구조계산서, 감리보고서 등) 설계·시공, 감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체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공법 등이 포함되어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시공자 등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역시 생산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기록의 경우 기술의 변화를 고려할 때 공개한다고 하여 법인등의 경영상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공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적용 관련(개인정보)
 - 건설공사의 설계, 조사, 시공, 감리 등을 수행하는 업체의 참여인력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볼 수 있겠으나, 본 기록들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및 다중이용시설 공사 관련으로서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마)에 해당되어 성명, 직업, 직위, 기술등급 정보는 공개가능할 것임. 또

한 현재 건설정보알림이 서비스를 통해서도 주요 책임자들의 성명,기술등급 등을 공개하는 공사가 다수임

- 다만, 그밖에 개인의 구체적인 이력이나 생년월일, 주소, 자격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필요

□ 재분류 결과

유형	주요 기록	구분	재분류 의견	비고
시방서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등	30년 경과	공개	※ 참여인력의 성명,직위,기술등급 등의 정보 공개 가능
		30년 미경과	공개	
구조계산 관련 도서	구조계산서, 설비계산서, 수리계산서 외	30년 경과	공개	상동
		30년 미경과	공개	
공사비용 관련 도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원가계 산서, 단가조사서, 산출조사서 외	30년 경과	공개	상동
		30년 미경과	공개	
토지·지질 관련 도서	지질조사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외	30년 경과	공개	상동
		30년 미경과	공개	
감리보고서	- 감리계획서 - 월간/분기/중간 감리보고서 - 최종/완료 감리보고서, 감리용 역 준공보고서	30년 경과	공개	상동
		30년 미경과	공개	

※ 단, 개별 기록 확인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 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
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한 부분공개 가능

〈안건3〉

개인정보 포함된 30년경과 기록의 공개 확대

I 안건 개요

□ 취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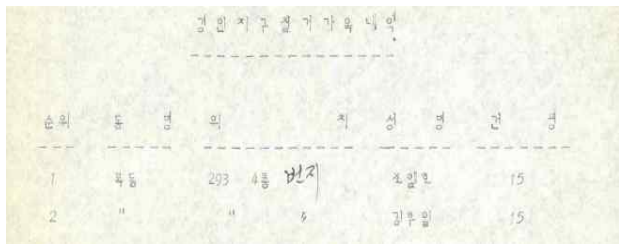
- 공공기록물법상 규정된 30년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생산 30년 경과 후에도 기계적으로 비공개를 유지하는 관행에 대해 재검토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권리 구제를 증대하는 방안 모색

□ 검토대상 기록 정보 및 기록유형

- 기록정보: 30년 경과 토지·재산 관련 기록 내의 개인(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
- 기록유형: 토지이동결의서, 측량원도, 토지조서, 보상조서, 환지조서, 환지예정지지정서 등 토지,재산 관련하여 서울시·구 관청에서 작성한 자료
※ 개인이 제출한 문서 제외

□ 생산부서 : 도시관리과, 지적과, 각종 도시개발 관련 부서 외

□ 분 량 : 10만건 이상

	
환지예정지지정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철거가옥 내역

에 대해서도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 처리 후 공개하고 있어 열람
실무자의 업무부담 과중

- 청구인이 찾고자 하는 성명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므로 기록 조회를 청구인이 하지 못하고 열람 실무자가 대신 조회해서 제공해야 하는 문제
- 청구인이 직접 찾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 예약 후 열람실에 방문하여 제한적 열람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열람편의 및 권리구제에 제약 발생

□ 공개 검토

○ 토지소유자 등 개인의 성명: 공개

- 생산 30년이 경과한 토지·재산 관련 기록으로서, 현재는 토지 소유자 등 개인의 성명 중 성에 한해 공개하고 있으나, 성명 전체를 공개한다고 하여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는 부분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를 통해 시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토지의 경우 완전한 사적 재산이라기 보다 제한된 공공재의 성격이 크므로 국민의 알권리의 차원에서도 소유자 성명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21년 제2차 공개심의회 심의결과에 의해, 한 건 내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은 모두 공개하고 있어, 기록물 본 건 내의 성명 정보를 비공개하는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음.

○ 토지소유자 등 개인의 주소: 50년 경과시 공개

- 30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어, 성명과 함께 주소 전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일괄적으로 주소를 공개하는 것은 조심스러움
- 다만, 1950~60년대 기록인 농지분배 기록에 대해 개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하여 공개 결정한 지난 '21년 제3차 심의회 결과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생산된 지 50년이 경과한 토지·재산 관련 기록의 경우 소유자 등 개인의 성명과 함께 주소를 공개하여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서울시·구 등 관청에 의해 작성된 공식 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한하며, 개인이 제출한 각종 신청서 등에 포함된 성명,주소 등의 정보는 비공개 유지

□ 재분류 결과

기록물 유형	정보 내용	구분	재분류의견
토지이동결의서, 측량원도, 토지조서, 보상조서, 환지조서, 환지예정지지정서 등 토지,재산 관련하여 서울시·구 관청에서 작성한 자료	토지소유자 등 개인의 성명	30년 경과	공개
	토지소유자 등 개인의 주소	30년 경과 ~50년 미만	시군구까지 공개
		50년 경과	공개

끝.

2022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공개용)

2022년 7월

행정국
(서울기록원)

2022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22. 7. 15.(금) 14:00~16:00
- ◆ 장 소 : 서울기록원 5층 회의실
- ◆ 참 석 : 8명
 - 위촉위원(4): 이상미(위원장), 김성순, 김희란, 박종연
 - 내부위원(3): 김은실(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장), 원종관(보존서비스과장)
김필래(운영지원과장)
 - 배 석 자(1): 서수련(간사)

◆ 안 건

- 〈안전1〉 환경영향평가서 기록의 공개재분류(30년 미경과)
- 〈안전2〉 관급 건설공사 설계도서,감리보고서의 공개재분류(30년 미경과)
- 〈안전3〉 개인정보 포함 30년경과 토지,재산 기록의 공개범위 확대

◆ 회의결과

〈안전1〉 가결

○ 공개

- 단, 개별 기록 열람 제공시 영업비밀 관련성에 대해 생산부서 의견 청취 후 결정
- 군시설물 등 국가안보 관련된 사항은 예외적으로 비공개 가능
- 참여인력(작성자)의 성명,소속,자격 등 공개 가능

〈안전2〉 가결

- 지방서, 구조계산 관련도서, 공사비용 관련도서, 토지·지질 관련 도서, 감리보고서
 - 공개여부: 공개
 - 참여인력의 성명,직위,기술등급 등의 정보 공개 가능
 - 단, 개별기록 확인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기타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한 부분공개 가능

〈안전 3〉 수정가결

- 대상기록
 - 토지, 재산 관련하여 서울시(구) 관청에서 작성한 30년 경과 자료(토지이동결의서, 측량원도, 토지조서, 보상조서, 환지조서, 환지예정지지정서 등)
- 공개여부
 - 토지소유자 등 개인의 성명, 주소 : 공개

☐ 주요 발언 내용

▶ 개회

〈위원장〉

- 지금부터 2022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해주셔서 전체 7명의 위원 전원 참석으로 회의가 개의되었음.
- 오늘은 안건이 3개이며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및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에 대해 간사의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을 작성한 의결서에 대해 위원 확인 및 서명을 통해 회의가 마무리되었음.

▶ 〈안전 1: 환경영향평가서 기록의 공개재분류(30년 미경과)〉 심의

〈간사〉

- 안건 설명 ※ 붙임 안건 참고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기록원에서 제시한 검토의견과 다르지 않은 의견을 주셨음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발언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 지금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책자 형태의 과거의 환경영향평가서이지만 현재는 전자파일로 생산되어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RMS(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이관받게 되는 것인지 혹은 환경영향평가시스템에서 받아와야 하는 것인지?

〈위원〉

- RMS를 통해서..

〈간사〉

- 용량문제만 아니면 웬만해선 등록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

〈위원〉

- 거기서부터 공개값이 ‘공개’로 넘어오게 되면 공개재분류를 안해도 되는거죠

〈간사〉

- 네

〈위원〉

- 환경영향평가서가 별도의 위원회에서 다루는 회의 자료로 보이는데, 정보소통광장에서는 이런 기록들이 어떻게 공개되고 있는지

〈간사〉

- 안건은 첨부자료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소통광장에서는 첨부 안건자료까지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 회의결과에도 안건명과 결과만 공개되는 경우가 많고

안전자료 전체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위원〉

-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이라는 별도의 시스템에 자료가 들어있으므로 RMS에는 평가서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것인지.

〈간사〉

- 사업주체로부터 접수 후에 유관부서에 의견조회 등을 하는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문의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을 것임

〈위원〉

- 의견조회 사항에 첨부파일로 들어있을 수는 있어도, 그 주관부서에 어떤 결과론적인 종결문서로서의 예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지? 향후에도 이런 사안에 대해 공개 여부를 조금 더 공개쪽으로 판단하기 위해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현재 전자로 생산되는 형태를 모르는 경우에서 이런 기준이 그냥 비전자에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인지가 궁금했음. 사실 행정정보데이터세트로 보임. 이런 결과론들이 한번에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임.
- 저희가 내용을 각각 어느 정도는 다시 평가해서 롯데월드처럼 특정 건물의 유형 등을 판단해서 영업상 비밀 등을 내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인지.

〈간사〉

- 시간이 경과해서일 수도 있지만, 롯데월드도 지금은 또 올라와 있는 걸로 보서는 내용적으로 크게 민감한 부분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공개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함.

〈위원장〉

-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지

〈위원〉

- 부분공개라고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보임. 지금 판단기준이 두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10년이 경과하면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그런 것이 없다면, 결국 주관부서에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임. 만약에 시스템에 공개된 것을 전부 확인한 후 모두 공개를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공개되지 않은 자료도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보임.

〈위원〉

- 영업비밀 관련해서 ‘특별한 영업비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 특별한 것인지가 좀 어려운 것 같음. 그 외에는 공개를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음. 10년이 경과하기도 했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 공개하는 게 사실 당연해보임.

〈위원장〉

-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지.

〈위원〉

- 롯데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을 공개하라고 한 사례가 있는데 요약문은 무엇인지, 어느정도까지 공개하라는 것인지, 요약문이 따로 있는 것인지. 다시 생산해서 요약문을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등이 궁금함

〈간사〉

- 요약문을 다시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보임

〈위원〉

- 평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표지, 요약문 등이 다 등록되어 있음. 등록할 때부터 요약문이 생산되는 것으로 보임.

〈위원〉

- 평가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요약문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음

〈위원〉

- 요약문을 따로 만들기는 함. 영업상의 비밀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약문에도 많은 내용이 들어있음. 그 요약문도 공개를 안했다는 이야기인지 궁금.

〈위원〉

- 요약문이 올라가 있는 건지 만들어서 받는 건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상태이니 좀 더 확인하고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위원〉

- 그 사례는 기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룬 하나의 사례를 소개한 것일 뿐, 요약문을 공개한다는 것이 안건에 쓰여있는 게 아니라면 그럴 것은 아닌 것 같음.

〈위원〉

- 영업상의 비밀이 우려된다면 최소한의 요약문이라도 공개하라는 의미인지 요약문이 없지만 작성을 해서 공개하라는 의미인지가 정확하지 않음

〈위원〉

- 작성을 시켰을 리는 없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미일 것임

〈위원〉

- 특별한 영업 비밀이 있을 수 있는데 다 공개하라는 판단을 할 수는 없으니 부분공개로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음

〈위원〉

- 얼마나 많을 지가 문제일 것임. 군시설물이나 영업비밀 가능성이 크게 없을 것 같음.

〈위원장〉

- 10년 이상 되었으므로 참여자의 성명, 직위 등 다른 것들은 다 공개를 하되 단지 군 시설 같은 국가안보 관련 사항이나 특별한 영업 비밀 같은 경우에만 비공개로 한다는 검토의견대로 안건을 그대로 승인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할지

〈위원〉

- 전반적으로는 공개인데 두 가지 사안의 의견청취나 판단을 해서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간다는 의미인지

〈위원〉

- ○○○ 위원 사전검토의견은 부분공개로 주셨고, 서울기록원 내부검토 의견은 공개임

〈위원〉

- 세부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임

〈간사〉

- 전체적으로 공개라고 입력을 하되 원문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열람청구시에 사안별로 생산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열람을 제공하는 방식이면 될지
- 부분공개로 결정을 하게 되면 모든 건을 부분공개로 입력을 하게 됨

〈위원장〉

- 공개로 하되, 열람 제공시에 영업비밀 및 국가기밀 관련성 판단하여 부분공개 가능한 것으로 의결하겠음. (위원 일동 동의)

▶ <안건 2: 관급 건설공사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공개재분류(30년 미경과)> 심의

<간사>

- 안건 설명 ※ 붙임 안건 참고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부분공개로 의견 주셨는데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으로 보임 (3호,6호 적용 여부 확인)

<위원>

- 사전검토의견을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된 것 같음

<위원장>

- 건설 관련 전문가가 계시면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임.
- 질문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발언 바람

<위원>

- 7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을지. 원가계산과는 달리, 감리 등에서 특별한 기술, 공법, 특히 관련해서 7호에 해당될 가능성에 대해 한번 확인해보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함.

<위원장>

- 도면 부분은 이번 안건에서 아예 빠진 것인지

<간사>

- 도면은 세부 수치 등이 포함된 경우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도면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도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 검토가 필요하므로 도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별도로 다루고자 함.

<위원>

- 구청에서 개인 건축물 도면 관련해서 사례들이 있는데 공개하는

경우도 비공개하는 경우도 보았음.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서 심의에 도움이 되었음. 도면은 영업상 비밀이나 범죄 가능성 등에 더욱 관련이 있을 것임.

〈위원〉

- 관련 판단사례를 4가지 제시해주셨는데, 민간에서 작성한 문서는 비공개이고 공공에서 작성한 문서는 공개로 판단되어 있음. 그러므로 공공에서 작성한 자료는 공개되는 것이 맞다고 봄. 민간에서 작성한 것 중에서도 10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라는 취지가 기록원 검토의견 맞는지.

〈위원〉

- 관급 건설공사이므로 민간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공공으로 봐야 할 것임

〈위원〉

- 판단사례에서 민간은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거의 최신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인 것으로 보임. 지금 안건은 다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위원〉

- 기술이 급변하는 것을 보았을 때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영업비밀 관련성이 커보이지는 않음.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신지. 감리 등에서 영업비밀 관련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

- 다음에 유사 안건이 있을 때 검토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제시한 의견임

〈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는지. (일동 동의)
- 가결하겠음.

▶ <안건 3: 개인정보 포함 30년경과 토지,재산 기록의 공개범위 확대(30년 경과)>

<간사>

- 안건 설명 ※ 붙임 안건 참고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기록원에서 제시한 검토의견과 같은 의견 주셨음

<위원>

- 모두 공개로 사전검토의견 드렸음. 범죄기록 같은 것도 아닌 개인의 토지소유 사항이 30년이나 경과했는데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음
- 이런 토지 기록을 누가 주로 찾는지

<간사>

- 보상이나 조상땅찾기 관련하여 찾고 있음

<위원>

- 정보공개법 외의 근거법률이 무엇인지.

<간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30년 공개 원칙이 있음

<위원>

-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므로, 50년 경과한 경우는 사실상 개인정보가 아닐 가능성이 크므로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음. 하지만, 공공기록물법 제35조는 개인정보에 특별히 적용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음.

〈간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두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함

〈위원〉

-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위원〉

- 원치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음. 사생활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임

〈위원〉

- 소유자 성명, 주소는 구등기에 다 나오는 것이니까 공개해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주소를 시군구까지만 공개를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음.
- 시군구까지 공개하는 것도 처리에 손이 많이 가는 것 아닌지.

〈간사〉

-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주소 공개하려는 측면도 있음

〈위원〉

- 등기에 다 나오는데 왜 굳이 시군구까지만 공개해야 하는지

〈위원〉

- 국가기록원은 공개하는지

〈간사〉

- 하지 않고 있음

〈위원〉

- 업무적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일 수 있고, 내용적으로도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관행적으로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기록원이 최초로 공개를 한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 리스크도 감안해야 할 것임

〈위원〉

-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할 것임. 공개를 통한 이익이 행정의 효율성에 불과하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오는 위험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지.

〈위원〉

-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님.

〈위원〉

- 침해의 우려가 있다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음. 시군구까지는 몰라도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위원〉

- 서울기록원 검토의견이 국가기록원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공개범위가 넓어지는 것인지. 어디가 넓어지는 것인지.

〈간사〉

- 국가기록원은 성명, 주소를 거의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다만, 공개로 설정된 상태로 이관받은 경우, 공개기록물은 재분류를 하지 않으니 공개로 제공된 사례를 본 적은 있음.
- 업무 편의를 위한 측면도 있고, 브로커 등이 결국 이런 자료를 많이 활용하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도, 이런 정보를 굳이 비공개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들었음.

〈위원〉

- 브로커라고 하지만 실제로 권리자를 찾는 것이기도 함.

〈위원〉

- 서울기록원의 기록을 공개를 통해 많이 활용되게 함으로써 열람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봄. 가능하면 계속 공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임. 이번 사안은 적극행정의 사례로 외부로 전파하여 다른 공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임. 관행적인 부분을 깨는 것이 필요함.

〈위원장〉

- 현재 기록원 의견은 주소에 대해 30년 경과시 시군구 공개, 50년 경과시 전체 공개임. 위원님들의 의견은 30년 경과시 모두 공개 의견과 50년 경과에도 관계없이 시군구까지만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음

〈위원〉

- 50년 경과라는 것은 별도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30년 기준만 존재하는 것이죠. (간사: 네)
- 개인의 성명은 30년 경과와 관계없이 모두 공개하고 있는 것인지

〈간사〉

- 30년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성명, 주소 모두 공개하지 않음. 30년 경과한 경우에 성을 공개함.

〈위원〉

- 50년이라는 기준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애매해 보임

〈위원〉

- 50년 기준은 별도로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음.

〈위원장〉

- ○○○ 위원님, ○○○ 위원님은 50년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30년 경과시 동일하게 시군구까지 공개하자는 의견으로 보임
- ○○○ 위원과 ○○○ 위원은 30년 경과하면 전체 주소 공개

가능하다는 의견임

- 위원님 각자의 의견을 확인해보겠음.

〈○○○ 위원, ○○○ 위원〉

- 30년 경과시 주소 전체 공개 가능하다는 의견임.

〈○○○ 위원, ○○○ 위원〉

- 30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 공개한다는 의견임

〈위원장〉

- 기록원에서 당초 제시한 의견대로 30년 경과~50년 미만까지는 시군구 공개, 50년 경과시 전체 공개 의견임.

〈위원〉

- 기존 심의에서 30년 경과시 시군구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 이번 의결에 의해 기존 의결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는지
- 기존 의결과 달라지기는 하지만, 30년 경과시 주소 전체 공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위원장〉

- 기존 심의 결과를 변경하는 것임

〈위원〉

- 기존 심의에서 퇴보하는 것은 아니고 발전적인 변경으로 봄.

〈위원〉

-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소유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로 보기 힘든 것 같음.

〈위원장〉

- 다수결로 하자면, 30년 경과시 모두 공개가능하다는 의견이 네 분으로 조금 더 많았음. 30년 경과시 시군구 공개 의견이 두분,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한분임.

- 다수결로 의결을 할까요.
- 다수결로 의결을 하되 다른 의견도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할 상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다루는 것으로 하면 어떨지. (일동 동의)

〈위원〉

- 실무를 하다보면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거나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심의를 통해 보완해나가면 될 것임

〈위원장〉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30년 경과시 소유자 개인의 성명, 주소 전체에 대해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음. (일동 동의)
- 의결서 작성 요청

〈○○○ 위원, ○○○ 위원 ○○○ 위원〉

- 분야별로 전문가를 심의에 초청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임

〈위원장〉

- 의결서 확인 요청
- 의결서 내용에 모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시면 서명을 요청드릴
- 이상으로 2022년 제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음. 끝.